정후식 칼럼

‘10년 주기 보수·진보 교체’ 이번에는

논설실장·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많게는 10여 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치열한 경선을 통과한 각 당의 후보들은 이제 또 다른 검증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기면 진짜 대권(大權)을 거머쥐는 본선 무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뽑았다. 이에 따라 초반 대선 레이스는 원내 정당 기준 4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주자는 거대 양당의 이재명·윤석열 후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청년 배당과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잇따라 실행하면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입증했다. ‘사이다’라는 별명처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거침이 없었고, 비주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당 후보로 선출돼 정권 재창출의 책무를 안게 됐다.

윤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살아 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비리를 모두 수사한 ‘강골 검사’ 이미지가 최대 자산이다. ‘적폐 청산’ 수사 덕에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정부와 각을 세우다 사퇴했다. 이후 대선 도전 선언 4개월 만에 ‘정치 신인’으로서 제1 야당 후보에 올라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게 됐다.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며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철학과 삶의 궤적은 극과 극이지만, 공통점도 적지 않다. 우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거대 양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 가운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일곱 명의 대통령이 모두 한 번 이상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의도 정치 이력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 0선’ 후보들이 탄생한 것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불신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좌다. 둘 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이 후보와 검사 출신의 윤 후보 간 대결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가 벌였던 경쟁 구도와 비슷하다.

‘저돌적 리더십’으로 견고한 열혈 지지층(fandom)을 형성해 온 반면 반대(anti)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닮았다. 국정 운영 비전도 얼핏 보면 유사하다. 이 후보는 ‘공정 성장’을,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어 ‘공정’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똑같이 ‘성장’을 외치면서도 각각 ‘분배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결은 판이하다.

두 후보의 최대 과제가 ‘사법 리스크’ 극복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윤 후보는 ‘고발 사주’라는 대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 결과 후보 본인은 물론 측근 인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어느 쪽이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나 윤 후보의 부인·장모를 둘러싼 의혹 등 ‘가족 리스크’도 장애물이다. 설화가 잦고, 2030세대 및 여성 지지율이 두텁지 못한 점도 비슷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나고,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민심은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폭등, 조국 사태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도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좀 떨어지긴 했지만 40%를 오르내리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심장으로 역대 대선 때마다 방향타 역할을 해 온 호남 민심의 선택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 진영이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았다. 노태우·김영삼의 보수 정권 이후 김대중·노무현의 진보 정권, 그리고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며 들어선 것이다. 이 같은 과거의 ‘10년 주기론’를 적용할 경우 정권 연장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내년 대선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 5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추세에 불과할 뿐 정해진 법칙은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임기 4년에 중임 가능)들도 1992년 이후 빌 클린턴(민주당), 조지 W. 부시(공화당), 버락 오바마(민주당)까지는 8년 주기가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공화당)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4년 만에 조 바이든(민주당)에게 자리를 넘겨야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그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접전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뽑을 사람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과거 대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진영 대결로 치달을 경우 이번에도 3~5% 이내에서 승패가 갈린 역대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내년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해 공정과 통합을 모색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의 회고적 성격을 띠는 총선과 달리 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적 투표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초치기로 급조한 정책으로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비전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가 대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은펜칼럼

‘광주·전남 도농교류센터’를 선거 공약으로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기나긴 터널 같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했다. 그동안 답답하게 억눌렸던 나들이 욕구가 분출되며 유명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아직 이르지만, 머지않아 해외 여행의 욕구도 분출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치는 유명 관광지나 코로나 위험이 여전한 해외 여행은 코로나 종식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종류를 바꿔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도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도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기쁨을 주고, 농촌에는 풍요와 소득을 안겨 주는 ‘도농교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봉착한 반면, 도시 지역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교통·환경·일자리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으로 사람을 분산시키는 귀농·귀촌 정책 차원에서도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농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농촌 체험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74개가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에 있는 도시민들 중 농촌체험마을에 방문해서 체험과 숙박을 해 본 사람이 아주 드물고, 어떤 체험마을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농촌, 산촌, 어촌에 좋은 체험마을들이 조성되어 있고, 농촌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숙박·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의 친환경 건강한 먹거리로 지역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으며, 지속적인 농산물 직거래로 이어진다.

그래서 필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투자하여 광주시내에 ‘광주·전남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전남이 함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도농교류 사업이 광주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즐거움을 주고, 전남 사람들에게는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시도가 협력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효율적인 것이다. 특히 도농교류센터가 광주시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일상적인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 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찾을 방문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양 자치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여 공간과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시도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광주·전남 도농교류센터에는 단순히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사무실만 둘 것이 아니라 도농교류와 농촌에 대한 각종 강좌와 행사를 열 수 있는 강당 및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 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장도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식당과 카페 등도 함께 갖추어 일상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전남의 농촌체험마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단체와 전남 지역 향우회 네트워크 등도 적극 활용하여 체험·식사·숙박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거점 조직을 대전, 부산, 서울, 인천, 대구 등에도 인접 농촌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서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거점 도농교류센터를 대선 후보들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사회가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소망한다.

기 고

민간공원에 노약자 산책로 조성을

이여성
전 광주·전남병무청장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희대의 역병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수범을 보여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예방 백신에도 돌파 감염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질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문화·교육·종교 등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 또한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 부재로 인한 우울증, 외로움 등을 겪고 있다. 또한 일반 사회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업무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가까운 산과 공원을 찾는다. 그러나 광주에는 평탄한 산책로가 적고 공원 등에 있는 산책로는 경사진 곳이 많아 노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헬스장이나 인근 학교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포츠나 레저 시설들이 통제되고 학교 운동장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약자들이 걸으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공원 부지 면적 비율(92%)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나무를 심거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업들을 수범적으로 잘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와 건강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울러 이를 더욱 발전시켜 노약자 등 시민이 쉽게 걸으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책길을 조성하면 좋겠다. 기존 도심 공원이나 무등산 등 산행로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다니며 산 정상까지 수직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고 돌과 나무 뿌리로 인해 노면이 고르지 못해 노약자가 걷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는 물론 성인병과 만성 질환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되고, 근육과 뇌 활동을 강화하여 관절 통증 완화와 치매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코로나19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각 공원에서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평탄한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 산책로의 고도가 낮고 경사가 지지 않으며 나무들을 많이 심으면 금상첨화이겠다. 원점 회귀형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되 굴곡이 있는 곳은 판자로 높이를 맞추어 준다면 참으로 시민에게 좋은 심신 건강의 장이 될 것이다.

社 說

‘15년 공든 탑’ 국립심뇌혈관센터 차질 없도록

질병관리청이 어렵사리 확보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을 여태껏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자칫 임기 내 첫 삽조차 뜨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국립뇌심혈관센터는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장성 나노산단 일원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데 이개호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및 부지 매입비 44억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발주된 관련 연구 용역이 올 10월에야 마무리되면서 실시설계가 지연된 데다 용역 결과 당초 49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부지는 2만 3000㎡에서 3만 8000㎡로 늘어난 탓이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사업 지연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비와 부지·인력 등 센터 규모를 키우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증액된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넣지 않았다. 특히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를 일부라도 매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선 질병관리청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장성군과 전남대병원이 처음 제안해 추진된 지역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10여 년간 표류한 끝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됐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확보된 예산을 제때 집행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여의치 않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해 부지 매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섬진강수해 난 지 언제인데 아직 보상 안 되나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섬진강 수해가 발생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해 원인을 놓고 정부와 주민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댐 하류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지역 수재민은 3천606명으로 이들이 지난 10월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수해 피해액은 2천 3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피해 주민들 간에 수해 원인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 피해 규모 산정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에서 법 제도의 한계와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그리고 하천의 예방 투자 정비 부족 등을 수해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피해 지자체와 주민·전문가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 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치수보다는 수질에 신경 쓰는 환경부가 홍수 대비보다는 담수에 치중해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수해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수해 피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 지사는 최근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히 국비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정부는 수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전액을 보상해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위드 코로나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감염병인 코로나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은 백신 미접종자와 취약층 전파 차단, 강화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숫자가 늘더라도 백신 효과로 인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인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및 유통업계 등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직장 동료 및 친구들의 모임도 시작되면서 사회공동체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확진자가 최근 1일 5만 명 이상이 발생하면서 다시 빗장을 걸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을 수 있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게 될 수 있다.

물론 2년여 덩인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나머지 자칫 경각심을 잃을 수 있다. 그동안 ‘K-방역’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모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 덕분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